

[심포지엄]

산업의학에서 바라본 건강검진기본법

주 영 수

한림의대

건강검진기본법 검토 - 시행령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기획재정부 전문학계, 소비자단체, 공급자 대표, 사업주 및 근로자, 학교장, 보험자
 - 전문위원회 +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질병관리본부)
-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생애주기별 표준 권고안 제정
- 제 국가검진 통합관리, 검진기관 지정 및 취소, 평가제 도입
- 검진자료의 수집, 관리, 개인정보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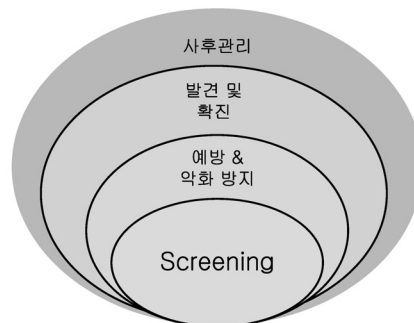
건강검진기본법 검토 - 시행규칙

- 검진기관 질관리
 - 지정기준 및 절차, 평가
 - * 건강검진기관 구분 :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
 - * 일반검진기관 인력기준 - 의사 1인당, 1일 건강검진 인원 25인 기준
 - * 출장검진기관 인력기준 - 의사 1인당, 1일 건강검진 인원 70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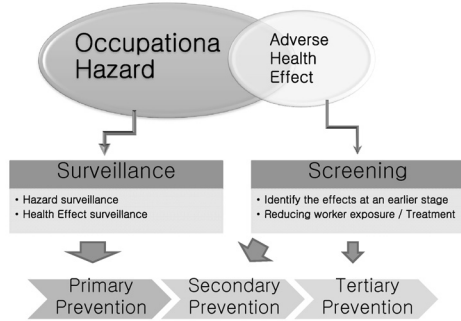
건강검진기본법의 ‘첫 인상’

- 산업보건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미흡함
 - ‘일반검진’과 ‘특수검진’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질관리를 위해서라면, ‘실제 1일 최대 검진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필요함

근로자 건강진단제도(특수검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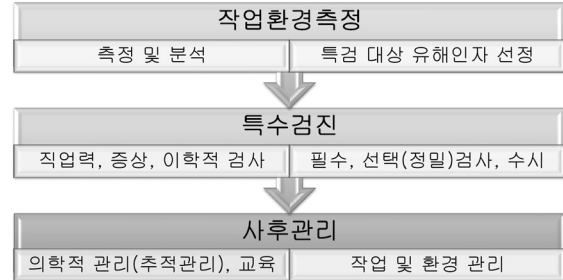


Occupational Health Surveil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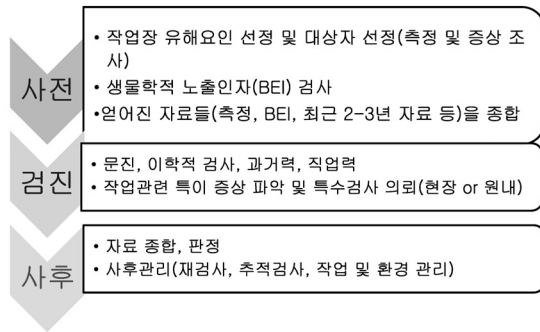


* Edward LB, Thomas PM(2005)

특수검진의 위치



특수검진의 순서



업종별, 규모별 근로자수

업종별	근로자(명)	사업장(개)	규모별	근로자(명)	사업장(개)
합계	11,688,797	1,292,696	합계	11,688,797	1,292,696
금융보험업	399,638	26,776	5인 미만	1,496,396	829,250
광업	15,656	1,267	5 ~ 9	1,005,302	155,923
제조업	3,032,667	236,429	10 ~ 29	1,787,635	113,129
전기가스상수도업	53,796	925	30 ~ 49	769,071	20,396
건설업	2,547,754	149,874	50 ~ 99	941,313	13,673
운수창고통신업	676,725	38,199	100 ~ 199	891,625	6,507
임업	73,381	5,781	200 ~ 299	446,513	1,853
어업	352	148	300 ~ 499	414,477	1,099
농업	31,781	3,281	500 ~ 999	450,675	660
기타 사업	4,857,047	830,016	1000 인 이상	938,036	332
			건설업	2,547,754	149,874

자료 : 근로복지공단 (2007)

특수검진의 특이성

- 가장 건강한 사람들 대상
 - Healthy Worker Effect
- 집단 검진 방식의 불가피성
 - 생산성 (productivity) 논리
- 사업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
 - 사업장 관련 사전정보 취득 / 사업장 접근성
- 직업병 판정 및 산재보상과의 연계
-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 가능
 - 검진 항목 및 대상자 축소
 - 사업주와 공급자와의 담합
 - 검진 결과 축소 및 은폐

근로자 건강진단제도 운영상 고려점

- 근로자 건강진단제도 운영주체의 이원화
 - 일반검진 : 보건복지가족부
 - 특수검진 : 노동부
- 일반검진과 특수검진간 불일치
 - 검진시기
 - 검진기관
- 기업규모 혹은 능력에 따른 차이
 - 대기업 : 자율적 포괄적 건강검진제도 운영
 - 소규모영세사업장 : 건강검진 회피
- 개인정보 보호 문제 (사업주의 정보열람권 제한?)
 - 개인정보 보호 vs 예방조치와 사후관리 책임

근로자 건강진단제도 운영상 고려점

- 건강검진 및 보건사업 적용의 용이성
 - 집단화
 - 조직화
 - 연속성
 - 동질성
 - 자원동원 및 지원
 - 사업효과 평가
 - 파급효과(가정 및 지역사회)

맺음말

- 건강검진기본법의 ‘취지’ 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음
- 그러나, 근로자 건강진단제도의 ‘특이성’ 과 다양한 ‘고려점’ 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향후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간 ‘지속적’ 이고 ‘긴밀한’ 건강진단제도 운영관련 정책논의 틀이 필요함